

# 한국 보수주의의 이론과 한 사례: 선우휘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창희 | 안동대학교

그간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빈곤성을 지적해 왔지만 존재론적으로도 한국에 보수주의적 가치가 전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가적 가치 판단에 앞서,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과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근대 보수주의가 갖는 존재론적 속성과 일반적 구성 요소를 검토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보수주의가 서구 역사를 기초로 형성된 맥락을 유념하여, 선행 연구들이 정리한 보수주의의 구성 요소들 중 서구적 특수성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근대 보수주의의 일반적 구성 요소를 재구성한다. 둘째, 한국 보수주의의 이론적 특성 규명이다. 보수주의의 일반적 구성 요소들은 한국 현대정치에 특수한 조건 및 그에 기인한 가치들과 접목되어 한국 보수주의를 형성해 왔다. 한국 현대정치를 규정하는 주요한 조건인 반공주의, 발전국가, 유교 전통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국 나름의 보수주의적 가치의 기초가 되어 왔다. 셋째, 한국 보수주의의 사례 분석이다. 20세기 후반 대표적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언론인 선우휘의 입장에 이리한 보수적 가치들이 어떻게 옹해되었는지 그의 논설과 소설을 인용하며 검토한다.

**주제어:** 한국 보수주의, 반공주의, 발전국가, 유교 전통, 선우휘

## I. 서론

###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무이념의 이념, 지킬 것 없는 보수’라는 압축적 표현은 한국 보수의 사상적 빈곤성을 상징한다. 이는 한국 보수주의가 내실 있는 사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든, 기득권의 반칙과 부패를 은폐하는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보든, 관점을 막론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진단이다(김병국 외 1999; 박효중 외 2005; 강정인 2001; 정해

구 2006; 양승태 외 2013).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까지도 한국 보수주의가 품격 있는 정치철학을 수립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왔지만, 한국사회에 보수주의가 존재론적으로도 전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수세력과 보수주의에 대한 평가적 가치 판단은 해당하는 가치 색출과 유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그 실체를 가려내는 작업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선행 연구들은 한국 보수주의의 실체를 구성하는 이론적 요소와 사례 탐색이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정해구 2006). 보수적 가치의 실체 탐색 작업의 결핍은 넓은 시야에서 볼 때 보수 정치세력의 노선과 대안 부재의 원인이면서 결과이자,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경쟁 구도가 정립되지 못한 고질적 문제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위 문제의식에서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근대 보수주의에 내재한 존재론적 속성을 메타 이론 차원에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보수주의가 서구 근대화를 기초로 형성된 맥락을 유념하여,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보수주의의 구성 요소들을 정리한 후 여기서 서구적 특수성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근대 보수주의의 일반적 구성 요소 몇 가지를 추출, 재구성한다. 둘째, 한국 보수주의의 이론적 특성 규명이다. 보수주의의 일반적 구성 요소들은 한국 현대정치에 고유한 조건과 접목되어 한국 보수주의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정치사를 관통해 온 특수한 가치들인 반공주의, 발전국가, 유교 전통의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름의 보수적 가치를 구성해 왔음을 논증해 본다. 셋째, 한국 보수주의의 한 사례 분석이다. 20세기 후반 대표적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언론인이자 작가 선우휘의 입장에 이 보수적 가치들이 어떻게 용해되었는지 그의 논설과 소설을 인용하며 검토한다. 선우휘는 1959년부터 1980년대까지 신문 논설위원과 주필로 재직하며 논란을 야기한 의제 설정과 아울러, 정치적 견해를 지상에 직설적으로 피력했다. 지속적 시계열 조사 통계는 없지만 당시 사실상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문필 활동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현재 한국 보수주의에 내재된 가치들을 예비적으로 시사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보수나 진보에 관련된 주제는 현실 정치와 연관된 가치개입적 논란 소지를 안고 있다. 가능하면 객관적 관점에서 현재 보수와 진보의 대치에 대한 호불호의 단순화를 우회하여, 보수주의의 이론적 특성을 조명하고, 한 유력한 20세기 보수 지식인의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으로써 한국 보수진영의 가치와 지향의 기원 및 현재성을 이론과 경험의 양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보수세력

을 ‘수구 꼴통’으로 폄훼하거나 ‘근대화의 주역’으로 격찬하는 것은 피상적 이미지 수준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식을 배제하고, 실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논의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일조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선행 연구

진보의 가치가 비로소 부분적으로나마 용인되기 시작한 민주화 이행기인 노태우 정권 당시 보수의 응집 과정은 시민혁명에 대응해 보수주의가 정립된 서구의 경로와 유사하다. 당시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기한 진보 진영의 노동, 교육, 통일운동에 맞서 ‘보수 우익론’이 등장한다(라종일 1990, 289-333). 하지만, 단기 국면의 대응에 머물렀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이론의 저변에 소화한 자기완결적 사상으로 승화하지는 못했다. 정당, 언론 및 군부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정세 분석을 위해 집필한 격문 양식의 제안이 대다수여서 현대사 전반에 대한 성찰을 포괄할 겨를이 없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학계와 언론 일각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 재평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맞물려 최근까지 첨예한 이슈기도 하다(한국일보 2015/10/21). 이후 진보세력의 제도권 정당 결성과 원내 진입, 군부의 정치 퇴진과 수평적 정권 교체가 잇따라 성취되며 보수의 결집이 본격화한다. 사회과학의 현실 개입성을 감안하면 보수세력 결집과 보수주의에 대한 지적 조명은 긴밀히 결합될 수밖에 없지만,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경험적 사례 연구가 풍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 연구 경향에 드러난다.

첫째, 한국 보수주의는 앞서 표현처럼 ‘무이념의 이념’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었다. 민주화 이전 한국사회는 보수 독점 지형이었기 때문에 굳이 담론이나 운동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관변 기획이 아닌 자율적 연구 차원에서 보수주의는 진보에 비견될 만한 작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sup>1)</sup> 권위주의에 자의반 타의반 협력한 지식인들의 경우 곡학아세 혐의가 짙은 이유도 있고, 진보 지식인들에 비해 학문적 작업을 충분히 남기지 못한 이유도 있다. 설령 그런 작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진보 지식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반항에 비견할 파급 효과를 거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1) 진보의 이론화는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의 정치인들과 리영희, 박현채, 한완상 등 학자들에 의해 변화와 개혁의 동기를 독려하는 작업들이 있었다.

분단 이래 극단적 이념 대립으로 점철된 정치사를 감안할 때 의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2)</sup>

둘째, 기존 연구들의 분석 대상이 시기적으로 ‘민주화 이후 현재’에 편중되어 있다.<sup>3)</sup> 과거사를 다루더라도 현재 관점에서 약술해 부가적으로 첨언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현 시점의 보수 세력의 주장’을 요약해 이를 보수주의로 유형화해 온 것이다(강정인 2008; 김호기 2005; 신중화 2012; 류대영 2004; 이항우 2011). ‘뉴라이트’ 이후 보수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한층 증폭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집중한 연구들의 시의성은 분명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일단 언어적으로 ‘과거를 외면한 보수주의’는 성립하기 힘든 형용 모순이다. 과거를 간과하고 현재에 치중한 분석은 보수의 개념상 방법론적으로 전도된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이 글이 사례로 드는 선우휘를 위시한 보수 지식인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도 미답 상태이다. 선우휘에 대해서는 소설에 대한 평론식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모두 사회과학이 아닌 문학적 접근으로써 작품 해부에 주력해 왔다(한수영 2001a: 2001b; 이익성 2004; 이정석 2010). 대표적 학자인 한수영(2001a, 259-279; 2001b, 53-82)은 평전 양식을 가미한 일련의 논문으로 그의 보수주의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주된 텍스트는 소설과 회고록이며, 정치학적 문제의식의 소산은 아니지만 영역과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컨텐츠 발굴을 시도한 선구적 업적이란 의미가 있다. 정치학적 관점의 작업은 문지영(2006, 335-341)의 연구가 유일한다. 소설에 나타난 선우휘의 정치관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분석을 초기 중편 『깃발 없는 기수』(1959)에 국한하여 정치적 보수주의 전반을 대상으로 수행한 작업은 아니다.

2) 강정인과 서희경(2013)의 연구는 정당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을 추적한 의미있는 시도였다.

3) 이나미(2011)의 연구는 보수주의에 대한 드문 통사적 연구로서 세부 사례보다는 시기 구분과 유형화를 시도했다.

## II. 보수주의: 개념과 이론

### 1. 보수주의의 존재론적 속성

보수주의의 대표적 개념 정의와 구분으로 상황, 기질, (정치)철학 차원으로 삼분하는 방법이 있는데(강정인 2001, 77-80) 앞의 두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공허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세번째 보수주의를 한국 보수주의의 분석 잣대로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 철학적 보수주의란 명명은 19세기 이래 서구의 맥락적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격상시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서구의 정치철학적 가치를 대입하는 것은 비교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유력한 이념형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서구의 정치철학적 보수주의가 근대 서구에 기초해 있다면, 서구와 다른 단절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 보수주의가 정당화하려는 대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원형이 주도된 1960년대 산업화 이후의 경험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전제된 보수주의의 시대적 범주는 기존 연구를 따라 '진보'의 신념과 이론이 정식화한 근현대이다. 이성, 자유, 진보를 낙관한 계몽주의에 입각하여 미래의 인간 해방을 합리적으로 기획하는 사상이 근대 진보주의라면(윤민재 2004; 양승태 외 2013), 이와 반대로 보수주의는 과거와 현실을 추수해 정당화함으로써 위상을 정립해 왔다.

첫 번째 들 수 있는 보수의 속성은 진보에 비해 숙명적이라 할만한 강한 대중성(對症性)이다. 진보사상의 문제의식이 미래에 대한 면밀한 기획인 데 비해, 보수주의의 문제의식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제어와 치유, 진보의 도전에 대응한 기존 질서의 정당화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제도사상사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공리(公理)에서 비롯된 테제와 논리를 구축해 왔다. 이들은 대개 추상적 기획과 합리적 방법론을 내포한 거대 이론을 따라 연역적으로 추론한 대안을 구상한다. 이에 비해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동등한 차원의 제도사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성 질서를 보전하려 하므로 이론보다 현실 정치에 분포된 역학관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변화를 감내하더라도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완충 장치에 주력한다. 이는 근대 이후 보수주의자들이 이론 못지 않게 현실과 직관을 강조해 왔음이 입증한다. 합리적 진보 이론에 수반된 제도 구상은 보수주의자가 봤을 때 실현 가

능성이 희박한 사변에 불과하다고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보수주의자들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공동체에 각인된 역사적 관행을 유념한다. 이 점에서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와 유사하게 ‘2차적 사상’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즉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분석의 시금석이 되는 이념형인 것과 달리 보수주의는 그 자체가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다.

대증성에 이어진 두 번째 속성은 보수주의가 채택한 이론적 주장과, 보수주의가 현실에서 의도하는 사회적 효과는 구분된다는 점이다. 보수주의의 관심사는 이론이 아니라 기존 질서와 가치 보전이다. 그리하여, 보수주의는 노선과 제도의 일관성을 견지하기보다, 때로 난삽하다 싶을 정도로 제도, 관행 및 가치의 목록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며 진보적 요소도 효용성이 인정되면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설령 나열된 요소 간에 이론적 괴리가 빚어져도 현실 보전 효과가 확보된다면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두 번째 속성으로 말미암은 세 번째 속성은 괴리가 심해 충돌하는 이론적 자원들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경향이다. 엄존해 온 역사에서 정당성을 찾는 보수주의는 이론적 일관성을 굳이 문제삼지 않고 상충하는 노선들도 병행시켜 포섭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론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연함은 진보주의자에게는 자기 검증의 결정적 관건이지만 보수주의자에게는 부수적 관심사인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시대별 모든 보수주의를 망라한 교집합적 보편 이론을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제의식에 따라 중범위 수준의 제한적 일반화만 가능할 따름이다.

미국 레이건정권 시기 이론적으로 이질적인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적 공동체주의가 신보수주의 내에서 결합한 것은(선우현 2010, 261-263)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안정과 질서 유지의 정치적 효과가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Sandel 2010, 309-312). 월남전 이후 ‘신좌파와 반문화운동이 빛은 사회 기강 문란’을 치유하고 ‘미국 전통의 도덕과 질서를 재건’하려는 대중적 동기가 작용하여, 화학적 융합을 거친 정제된 이론이 아닌 이질적 세력의 정치전략적 제휴가 성사된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샬(Thomas Marshal)이 구분한 시민적 자유, 참정권, 사회권의 3단계 시민권들 중 유독 시민적 자유에 집중한다(Hirshman 2010). 하이에크(F. Hayek)는 인민주권 원리와 사회국가를 비난하며 2, 3단계 시민권 확대를 경계한다. 그의 이론은 참여민주주의에 반발한 신보수주의로 수용되었다(Boaz 2009). 당시 보수적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 종교의 직관적이고 선협적인 가치 교육을 요구하며 소수 엘리트의 선도를 옹호했다.

이론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자유지상주의와 국가주의가 현실에서 제후한 것이다 (Sandel 2010, 309-311).

## 2. 보수주의의 일반적 구성 요소: 맥락에 따른 재구성

위에서 본 보수주의의 속성들을 감안할 때, 선행 연구들이 정리한 보수주의의 구성 요소들을 집약한 후, 서구 정치사의 특수한 요소들을 소거해가는 방식으로 근대 보수주의의 최소한의 공통된 일반 요소를 추출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버크(E. Burke)에서 신보수주의에 이르는 역대 서양 보수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지적해 왔는데(강정인 2001, 28에서 재인용, 김병국 외 1999; 윤민재 2004),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관이다. 합리성을 자기 이익 최대화의 관점에서 정의하든(Rawls 1999, 202), 이해 가능한 객관적 합당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든, 인간의 합리적 역량을 신뢰하는 인간관에 비해, 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적 분별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행과 직관, 처지에 따라 냉철한 사리 분별에 앞서 행동부터 하는 존재, 혹은 현실에서는 이성과 감정 구분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간 행태의 특성을 주목한다.

둘째, 개인의 소극적 자유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 증시는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지만 자유주의 특유의 자연권, 계약론, 공리 등 인권의 보편성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보수주의의 수용 여부가 다르다. 보수주의가 자연권 개념을 수용한 것은 고전 자유주의가 보수주의로 편입된 20세기에 이르러서였으며, 19세기 유럽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지지는 하되 소유권의 근거를 신분제와 연계시키기도 했다(양승태 외 2013).

셋째, 서구 보수주의는 국가 역할과 규모를 제한하려 든다고 알려져 있다. 공적 제도 대신 개인과 가족의 사적 자율성과 시장 논리를 신뢰하고 기획에 의한 평등보다 자율을 선호하며, 국가는 사회국가적 개입보다 엄정한 질서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인간의 능력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선천적(서구의 전통 보수주의)이든 후천적(20세기 신보수주의)이든 사회적 차별을 승인한다. 오늘날 보수주의는 신분제 복원을 시도하지는 않으나 통치를 담당하고 공공에 헌신하는 엘리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여전히 필수 덕목으로 지목한다.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으므로 인정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 발전을 우려한다. 참여 폭발은 다수의 전제를 초래할 수 있고, 대중은 사려 깊은 엘리트에 비해 자주 오판을 범해 공동체를 종종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소수의 지혜와 안정성의 미덕이 다수의 참여와 역동성의 활력보다 체제 유지와 교정에 더 유리하고 바람직하다는 신념이다.

여섯째, 종교는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종교는 제도화되어 그 사회의 규범과 습속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특히 서구 역사를 통틀어 보수주의 도덕 규범의 원천은 기독교였고, 신보수주의는 기독교 원리주의에 정도될 만큼 종교의 위세가 막강하다.

앞서 본 존재론적 속성을 고려하면, 근대 이후 국가 규모와 역할, 시장경제의 유형, 종교·윤리적 특징, 심리적 정향과 기질 등에서 보수주의의 공통 요소를 이론적으로 정형화하려는 시도는 대개 절반의 성공만 거두거나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적 특수성이 내장된 철학적 보수주의의 국가론, 시장론, 종교론 등 부문별 입론을 여과 없이 다른 사례에 대입하면 오히려 적실성을 해치게 된다. 한국적 의미와 사례 검토를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맥락을 유념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일반화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요소들 중 서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작은 국가, 자유방임 시장, 기독교 전통을 제외하면, 합리성 외에 직관과 관행도 중시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와 정치사회적 차별을 승인하는 엘리트주의,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자유라 할 수 있는 소박한 개인관과 가족주의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이 근대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공통된 요소들로서, 동일한 실체의 다른 측면들이다. 특히 ‘차별’은 일찍이 윌슨(F. Wilson)이 인류 역사상 모든 보수주의의 1차 속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이봉희 1996, 20).

먼저, 보수주의자들이 작은 국가를 지지한다는 명제는 일반화가 곤란한 과도한 단순화이자 역사적 오류이다. 19세기 영국 보수당 정권, 독일 비스마르크(O. Bismarck) 정권은 당대 진보세력과 투쟁하면서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국가 서비스를 선제 시행하였고(홍경준 2009, 138-144),<sup>4)</sup> 발전국가와 지도자본주의를 채택한 한국

4) 홍경준(2009)은 보수세력이 당시 진보세력이던 자유주의와의 정치적 경합관계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한 역사를 면밀하게 입증하고 있다.



의 경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규모 및 역할과 함수 관계에 있는 시장경제 운용 방식도 가변적이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지지한 보수세력은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예외나 일탈로 볼 수만은 없다. 비록 보수의 일탈이긴 했지만 독일 군국주의는 대공황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규모와 능력을 극대화시킨 국가였고, 레이건, 대처 집권 이전의 미국과 영국은 좌우파 정권 관계없이 수정자본주의 노선에 큰 차별성 없이 합의했다. 작은 국가 명제는 서유럽 일부와 미국에 어느 정도의 적실성은 있겠지만 보수주의에 특화된 고정적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구 보수주의 특유의 종교(기독교) 또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서구 보수주의에서 기독교가 갖는 의미에 상응하는 요소(counterpart)를 한국에서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비교를 통한 개성적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의식에 국한해야 한다(류대영 2004, 60-68). 한편, 그런 수준의 문제의식을 넘어 ‘아시아적 가치론’처럼 유교 전통을 경험 차원에서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거나 당위 차원에서 보수주의 혹은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유교의 의미를 침소봉대한 것이다.<sup>5)</sup> 또 현재 한국 개신교의 보수성에 서구와 유사한 비중을 부여하는 평가 역시 개성적 의미 이해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종교가 한국 보수주의에서 갖는 역사성과 현재성을 과대평가한 것이며, 방법론적으로도 동등한 수준의 대조가 아닌 오리엔탈리즘식 단순화가 될 위험도 크다. 한국은 여러 고등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네오콘이나 이슬람권마냥 특정 종교 단위가 보수세력에 편승해 정렬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종교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 동기를 규정,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합리성 외에도 관행, 경험, 직관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 보수에도 나타나는 근대 보수주의의 일반적 관점이다. 또 보수주의가 최근까지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중시해왔고 특히 신보수주의의 경제이론 분파

5) 최치원(2009)이 지적했듯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교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할 우려도 있다. 현대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유력한 자산이라는 의미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유교를 아시아적 가치논쟁 당시 학문적 자아 준거성의 자원으로 본 것도 초점을 잘못 잡은 것으로서, 학문의 자아 준거성과 자기 미화를 혼동한 탓이다. 학문의 자아 준거성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라는 의식과는 전혀 무관하며, 밀즈(Charles Wright Mills)의 파워엘리트론이나 오도넬(Guillermo O’Donnell) 관료적 권위주의론처럼 자국의 경험에 대한 냉정한 비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전 자유주의의 테제를 자유지상주의로 특화시켜 포섭한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sup>6)</sup> 그리고 차별적 엘리트주의는 근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근대 보수주의의 엘리트주의는 좀더 특정한 의미를 띤다. 선천적 신분보다, '계몽된 유능한 소수'라는 의미로 전환한 것이다. 개인의 역량은 후천적 노력으로 배양되므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자유주의 윤리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 보수주의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부정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21세기 신보수주의는 18세기 의회주의자 버크보다 민주제를 더 불신한다(이근식 2008, 158-166). 사회정의와 일반 의지 원리를 '히깨비'로 지칭하며 자생적 시장 질서 훼손을 비방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적대감에 가까운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 3. 한국 보수주의의 특수성: 반공주의, 발전국가 및 유교 가치

해방 후 조선에서 왕조국가와 일제 강점기 질서는 청산할 구체제였지 계승할 전통은 아니었으므로 보수주의의 자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명백한 부정적 기억에 불과했다. 남북한 모두 해방 후 들어선 제도와 규범의 원형은 서구에서 이식된 것이었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반공주의, 발전국가, 유교 전통은 식민 지배를 겪은 역사적 단절성으로 인해 한국 현대정치가 걸어온 경로를 좌우한 세 가지 변수였다.

단절된 역사란, '지킬 것 없는 과거를 물려받았음'을 의미한다. 현실에 지킬 무언가가 없는 조건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 보수주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현재형 창조와, 동시에 그를 보수주의의 콘텐츠로 끊임없이 편입시켜야 하는 과거형 보전이라는 중첩된 시제(時制)<sup>7)</sup>의 과업을 부여받았다. 역사의 단절로 말미암아,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미완의 과제에서 지킬 것을 찾아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적 전거(典據)라 할 수 있는 박정

6) 신자유주의가 고전 자유주의를 복원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사상이란 점은 누차 지적되었다. 이근식(2008), 윤민재(2004)는 이에 대해 자유를 중시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보수주의의 자유는 남성적 자유라는 점을 대비시킨다. 한편 하이에크는 이해 타산의 개인적 합리성은 인정하나 사회를 설계하는 공적 이성 능력은 롤스와 달리 부인한다. 신자유주의경제철학이 보수적 공동체주의와 결합한 이면에는 이처럼 정치적 제후만이 아닌 기묘한 이론적 친화성이 있다.

7)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표현되는 한국정치의 변동과정이 보수주의의 직접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희정권기는 서구 보수주의가 결집되던 시대와 대조적이다. 19세기 서구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정치 민주화도 불안해 했지만, 자본주의 질서가 사회를 잠식하는 데 큰 반감을 표현했다. 비록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긴 했으나 자본주의질서의 전방위적 확산에 맞서 맑스주의자들보다 더 가혹하게 산업자본주의를 비판했고(홍경준 2009, 136-144), 일부 서구 보수주의자들은 낭만주의 반동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보수세력은 산업자본주의를 앞장서 건설해왔다는 데 정체성과 정당성의 근원을 찾고 이를 강조하기까지 한다.<sup>8)</sup>

발전국가모델(박광주 1992)은 3당 합당 직전인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후 일부 변형되긴 했지만 지금도 국가 부문에 잔재한다. 박정희정권은 통치기간 중 국면별로 미묘한 온도차가 있기는 하나 1960년대에는 서구 보수와 달리 전통 가치규범을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일소해야 할 인습으로 격하시켰다. 서구 보수와 달리 ‘미래지향형 발전’을 거국적 과제로 삼은 것이다. ‘크고 강한 국가와 지도받는 시장’, 그리고 ‘혁파되어야 할 전통’이라는 관점을 보면 20세기 한국정치는 서구 보수주의의 경로와 선명하게 대조적이다.

발전국가의 산업화는 무어무어(Barrington Moore)가 나눈 근대화의 3유형 중 위로부터의 보수적 근대화를 이끈 국가주의 유형에 해당된다(최치원 2009; 양승태 외 2013, 207-210). 한국 국가주의는 독일, 일본과 달리 외세 강점을 거친 후 분단 상태로 남북한 체제가 출범한 차별성을 안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이식된 제도의 성공적 토착화는 남북 모두에 책정된 선결 과제였다. 외세가 진주하여 비롯된 타율적 과제였지만, 과거 유제를 청산하고 비어 있는 현실을 채우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으므로 필연적 과제이기도 했다.

분단과 전쟁은 이 첫째 과제를 심화시킨 둘째 과제를 낳았다. 즉 남북한이 서로 제압하거나 앞서려는 경쟁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과업만도 버거운 처지에, 다른 신생국과 달리 분단체제 아래서 쌍방이 서로 이겨야 한다는 두 번째 과제가 가중된 것이다. 반공주의는 좌파에 대한 단순한 안티테제에 그치지 않았다. 남한 정치경제를 일신하고 북한을 압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국 동인이 된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로 지적되는 반공주의의 원인과 영향은 주로 진보

8) 보수세력은 진보진영을 ‘민주화’세력, 스스로를 이른바 ‘산업화’ 세력으로 즐겨 대비시키곤 한다.

입장에서 비판해 왔는데(조희연 2003, 43-80; 김동춘 2000, 246-271), 다만 보수주의 관점의 재구성과 독해가 부족했을 따름이다(이나미 2011, 207-318). 북한을 앞서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성장의 목적은 자기 존립에 머물지 않고 적대적 충돌이든 선의의 경쟁이든 한반도 냉전 승리로 확대 설정되었다. 더 정당하고, 더 잘사는 체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당위 측면, 그리고 부국강병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장차 통일을 대비하자는 권력정치 측면 모두에서 반공주의는 강화 일로를 걸었다.

제도정치를 돌아보면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 자유당/한민당, 공화당/신민당, 민자당/민주당이 보여주듯 여야를 막론하고 반공은 보수정당 전반의 공통 분모였다. 전쟁 이후, 야당과 일부 재야도 북한보다 앞서야 한다는 명제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sup>9)</sup> 1963년 대선에서 야당은 여당 박정희후보의 좌익 경력과 민족주의 구호를 문제삼아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군부 장기 집권은 이 경향을 최고조로 몰아갔다. 반공은 1961년 쿠데타의 ‘공약 1조’로 명시되었고, 1972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유신체제 성립을 정당화하였으며, 1986년 ‘국시(國是) 논쟁’과 입법부 마비를 초래할만큼 공식 지배 이념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반공주의는 한국 보수주의의 한 구성 요소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력에 의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화의 절대적 명분이자 ‘국가 에토스’로까지 정립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지도자본주의노선에 기초한 개발독재의 정치적 근거 역시 반공주의가 부여하였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발전국가는 20세기 보수주의의 형성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해방과 산업화를 거치며 유교 가치는 통치이념이자 공공철학으로서 사상적 자격을 잃어 버렸다. 1919년 건국과 함께 임시정부 헌장에서부터 조선왕조는 구황 실이란 명칭 아래 자의반 타의반 퇴출되었다. 해방공간과 제헌의회에서도 유교는 헌정 원리로 채택되지도, 다수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복벽론이 공론화된 적은 한번도 없었고 통치 엘리트를 가리키던 3인칭 명사 ‘양반’은 옥설과 진배 없는 2인칭 대명사로 전락했다. 다만, 이후 유교 가치는 군부 정권의 취사 선택에 의한 상징 조작, 그리고 민간사회 저변의 습속 형태로 잔존해 왔다.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9) 1960년대 혁신 성향 간행물이던 『사상계』 기사들은 반공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공적 지위와 정당성을 잃은 반면, 민간 의식에 관성적으로 잔존하면서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목적 가치가 아닌 관계 이념의 수단으로 선별적으로 차용했던, 이중적 의미를 지닌 가치였다.

그러므로 유교를 한국 보수주의의 유력한 잠재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 위에서 본 바처럼 20세기 중반 이래 역사적 환경과 축적된 경험이 한국 보수세력이 처한 조건이었다. 임시정부 현장은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선언했지,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고, 더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체제는 환골탈태했다. 유교 가치라는 상부 구조를 받치던 경제사회적 토대가 혁파된 것이다.

둘째, 현존하는 전통을 정당화하는 보수주의 본연의 의미로 볼 때, 유교는 현재 유력하지도 않고 정당성을 공인받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권위가 현저히 약화된 가치를 되살리자는 주장은 일종의 인위적 복벽론이다. 보수주의는 있는 현실을 정당화하지, 있었던 과거 일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정당화하더라도 현재 질서 보전의 목적에 부합할 때 활용할 따름이다. 또한 보수주의는 존재론적 속성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이론을 발굴, 삽입하는 식의 인위적 기획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론이 현실의 변화를 이끌려는 진보와 달리, 보수주의는 현실을 추수하므로 설명 과거에 창연했던 전통이라 해도 존재감을 상실한 사상까지 무리한 정당화를 감행하진 않는다. 외세를 막지 못한 사대부와 반상제의 근거인 유교 이념이 인정받을 수 없었고, 더구나 박정희정권은 전통 혁파와 근대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명예혁명 이래 100년을 다듬어온 질서 파탄을 우려한 버크, 용커 기득권을 인정한 비스마르크, 패전에도 군주제를 유지한 일본과 달리 '전통과 근대의 단절'은 한국의 명료한 특징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이나 대안을 유교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수주의를 탐색하는 데 전통 가치규범을 방법론상 완전히 기각할 수는 없다. 전통 가치규범은 다음 두 차원에서 공공의 지향 원리가 아닌 발전국가와 반공주의를 '보완하는 자원'으로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첫째, 박정희정권은 1970년대 이후 유교 가치를 활용한 전략을 구사했다. 전통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인식은 1960년대까지 문약과 당쟁의 이미지로 표현했듯 사뭇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정부는 전통을 용의주도하게 삽입한 국민교육헌장과 교육문화정책을 실행하여(전재호 1998) 성장주의적 동원을 견인하고, 반공주의 주입과 병영문화적 통제

를 뒷받침하는 정치문화적 자원으로 끌어들이었다.<sup>10)</sup>

둘째, 시민사회 일상에 침윤된 흔적이다. 능력과 위엄을 지닌 지도자에 대한 일사 불란한 순응을 국민 통합이라 간주하는 전근대적 정치관과 일류대 진학과 출세를 추구하는 교육관에 깃든 ‘입신양명의 엘리트주의’이다. 여기에 개인의 삶과 가치의 절대적 의미를 가족에 두는 ‘가족주의’가 결합한다. 국가는 의도적으로 건강부회시킨 유교 가치를 고취하여 일반 시민들 스스로 능동적 정치 주체보다 통치를 따르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신민형 정치의식이 지속되었다. 후자는 전자와 결합하여 사회 안전망의 공적 확충이나 평등한 시민권, 참정권보다 개인과 가족이 각개 약진식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자식 세대를 출세시키거나, 지연과 학연에 의존하거나, 사적 경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로 나타났다. 지속된 과잉 교육열은 대표적 현상으로서 오랜 반상제와 과거제가 남긴 의식의 잔재이기도 하다.<sup>11)</sup>

국가 부문은 통치를 보조하는 보완재, 그리고 시민사회는 엘리트주의와 가족주의를 지속시켜 온 저변의 집단 의식이었으므로 유교 전통은 관성적 유제였지 한국 보수주의가 지향한 목적 가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교 자체보다 그로써 정당화된 엘리트주의와 가족주의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수주의 일반의 요소와 한국 정치의 특수한 조건이 어떻게 결합하였고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선우휘의 사례를 검토해 본다.

### III. 선우휘: 한국 보수주의자의 한 사례와 의미

#### 1. 인간관: 개인의 자유와 소박한 삶, 그리고 국가주의 사이에서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월남 지식인 선우휘는 해방 당시 교사, 전쟁중 장교를 지낸 후 대령 예편하여 1980년대까지 신문사에 재직했다. 군복무 중 소설로 등단한 선우

10) 안동 하회가 국책 지원을 받은 것도 서애나 퇴계 사상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순신을 서애 류성룡이 천거한 사실과 징비록이 국가안보를 강조한다는 해석에 의해서였다.

11) 이 의식과 행태들은 3김정치, 지역주의 등 여러 독특한 정치현상의 한 요인이 되어 온 것이다.

취는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발표하여 문단에서 ‘행동주의’ 장르를 개척했다.<sup>12)</sup> 소설과 칼럼에 나타난 행동주의 인간형은 이성적 판별에만 의존하기보다 직관에 따라, 충동이나 때로 술의 힘을 빌어 논리에 앞서 행동부터 하는 인간형을 가리킨다. 인간 행위의 유발 요인으로 합리성 못지 않게 관행과 경험을 중시한 서구 보수주의와 선우휘의 인간관은 공통적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변화무쌍한 20세기 한국 현대사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생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득권과 제도를 수호하려던 서구 보수와 달리 외세 침략, 분단 및 전쟁을 연이어 겪은 한국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과거의 안정된 제도와 권력은 사라졌고, 개인과 국가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확실하던 정치사적 조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작 『불꽃』부터 말년 칼럼에 자주 나타나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와 소박한 삶에 대한 선호 역시 자유주의 인권론에 기반한 이론이 아닌 직관과 체험 및 전통적 삶에 대한 향수의 소산이다. 서구 보수주의들의 소극적 자유와 개념상 일맥상통하지만 행동주의적 인간형과 마찬가지로 형성 맥락과 현실적 의미는 다르다. 내인론적, 자율적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 보수주의는 원치 않는 사회 변화에 맞선 결과 비자유주의적인 소극적 자유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선우휘의 소극적 자유는 그의 작품과 논설 전반에 이어지고 있는데 ‘포플러나무가 있고 소치는 아이, 개울이 흐르는 고향’(선우휘 1986a)이라는 목가적 동심의 세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었다. 즉, 외세에 이어 분단, 전쟁, 산업화의 소용돌이가 소박한 개인의 삶을 해친 외인론적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에서 우러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비자유주의적 자유라는 점은 그가 무언가를 할 자유 못지 않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 ‘남용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도 소중하며 이는 인내와 윤리의 미덕이라고 높이 산 것에서 드러난다(선우휘 1986a, 78). 같은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이상적 인간형을 ‘민중이나 서민과도 다른 보통사람’이라 표현했다. “... 보통사람은 ‘나서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권리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 아닌 존재로서 인간은 성격이 아닌 버릇이 운명”이라고 보며 “효도하는 버릇, 공부하는 버릇, 웃사람을 존경하는 버릇, 그런 의무적인 버릇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선우휘 1986a, 180)고 주장한다.

12) 행동주의는 정치학의 행태주의(혹은 행동주의) 방법과는 상이한 한국 문학계의 분류 명칭이다. 대표 연구자로 선우휘, 김성한 등이 있다.

이 소박하고 온정적인 삶의 보루는 가족공동체이다. 그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특징이 강한 보수주의자의 전형이다. 성공한 남한에서의 삶을 함께하지 못한 북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칼럼과 작품 곳곳에 표현된다. 이론보다 원초적 정서에서 발동하는 가족주의답게 선우휘 역시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 아닌, 체험에서 우러난 정서적 형태를 띤다. 특히 그의 칼럼에는 ‘부자자효’, ‘남자는 혼자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버지’, ‘고민이 있으면 명심보감을 매번 들여다보던 아버지’(선우휘 1986a)에 대한 회고가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추억을 글감으로 자주 쓴 것은 서북지역의 문화적 배경도 원인이겠지만 사범학교와 장교 경험에서 형성된 남성성 중시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끈끈한 가족의 정, 근면한 아버지의 권위, 유순한 현모양처 어머니를 그리는 심정, 그리고 이산가족으로서 더 강렬해진 가족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고급 장교 경력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대중적 존재감을 배가시킨 자산이었고, 유교문화권 특유의 가부장적 가족주의<sup>13)</sup>에는 당시 발전국가에 내재된 카리스마적 지배 요소 및 전통 가치를 국가주의적 통제전략에 삼입시킨 ‘국민윤리’ 가치 규범과 긴밀한 친화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자연스런 인성으로서 어떤 까닭이 있을 수 없고 기브 앤테이크 논리로 봐서도 안된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한다(선우휘 1986a, 52). 스승에 대한 예의도 마찬가지로 당시 대학가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선생을 경시하는 풍조’를 이데올로기의 폐단이라며 개탄한다. “일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나의 혐오는 거의 생리화되었다… 그런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일 수 없다. 논리가 정연하면 할수록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이다”(선우휘 1986a, 175) 이러한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까지 근대 진보의 변혁론에 대한 거의 본능적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소박한 삶과 전통적 인간관계가 근대화과정에서 급격히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짙게 표현했으나 성장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5천년 가난을 벗어나려는 조국 근대화’를 지지하였으며 면모를 일신해가는 전국의 풍경에 남다른 감회를 슬회하고 지방을 둘러보면서 “탄탄히 포장된 길을 보면, 험벗은 산과 초라한 초가, 한국사람의 게으름과 가난이 남에게 멸시받던 때를 생각하면 통쾌한 복수를 한 기분”을 느낀다(선우휘 1986a, 107). 또한 고향의 목가적 삶이 사라진 것은

13) 작가 정소성은 선우휘의 유고집에 기고한 후기에서 선우휘를 ‘협객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회한이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은 남한의 자유체제이며, 적어도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피력한다. “학생들은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 하는 모양인데 이 체제는 아주 귀중한 체제…”(선우휘 1986a)라는 언급은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표현한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난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절대 빈곤을 겪은 세대이자 실향민으로서 체제의 당위성을 확인시키는 확고부동한 근거였다.

이에 따라, 그는 경화되어가는 발전국가의 통치 방식을 두고 개인의 소박한 자유와 강력한 국가주의 사이에 표류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여준다. 박정희정권 당시 언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자 앞장서 반대하기도 했지만(주간동아 2015/12/30, 65),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개인의 소박하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에 비해 경직되지만 하는 군부독재의 국가주의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딜레마였다. 1980년대 전두환정권의 철권통치에도 끝내 시민사회의 저항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럼은 “쓰고 싶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침묵이 미덕이다”(선우휘 1986a, 79)라는 논조를 개진한다.

## 2.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엘리트주의

교사 출신 문필가이자 언론인이었으므로 부지중에 그는 ‘지식인 엘리트주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거의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기자나 교사 지식인이며, 칼럼들은 시종일관 엘리트주의를 행간에 깔았다. 엘리트주의는 선우휘가 청년 시절 관심을 가졌던 페이비언(Fabianism) 좌파에도 내재한 정향이다(선우휘 1986a). 지식인클럽 페이비언협회는 좌파 성향이었지만, 케인즈(J.M. Keynes)도 가담했을만큼, 사회 기본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변화를 선별한다는 ‘보수’의 의미와 접점을 이룬다.

“한국에 온 한 외국 언론인이 가장 감동한 장면으로 아침 일찍 수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꼽았다”는 인터뷰(선우휘 1986a, 122)를 소개한 칼럼에서 보듯 ‘지성과 배움’에 대한 그의 가치 부하는 민주주의 본연의 ‘평등과 민중 지배’보다 우선되었다. 또한 시위에 임하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개진한 한 대학생의 편지를 받고 이례적으로 그 전문을 소개하며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심정은 공감하고 신변을 걱정한다는 칼럼(선우휘 1986a, 99) 역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기대, 그리고 비록 학생운동가지만 ‘대항 엘리트’라는 점을 주목하여 ‘대우’하는 태도

를 무의식중에 드러낸다.

칼럼이나 소설 어디도 민중 참여 내지 이를테면 ‘일반 의지’ 등을 두둔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 중 자주 제기된 표현이 ‘포퓰리즘’이었다(채장수 2009). 원래 사회과학적 개념 정의와 달리 ‘무책임한 대중영합과 선동’이란 의미로 담론화한 이 용어는 ‘다수 의사의 관철 방식’에 대한 보수주의의 민감한 대응과 경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데모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선우휘 1986a) “4·19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만일 4·19가 재발한다면 5·16같은 경우도 뒤따라 악순환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선우휘 1986a, 184) 이 태도는 2000년대 이후 촛불집회 등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 반응과 거의 일치한다. 앞서 본 마샬의 3단계 시민권 중 한국 보수주의는 사실상 민주화 들어서야 첫번째 시민적 자유를 비로소 그러나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자유에 대한 동의도 여전히 주저하는 민간 보수세력이 상당함은 물론,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판결문이 웅변하듯 시민적 자유를 온전히 확립하는 데에는 사법부의 법리 해석조차 유보적 태도임이 현실이다.<sup>14)</sup> 하물며 1970년대와 80년대 국면에서 그 경향은 더 뚜렷했다.

참여 확대와 사회운동에 부정적 입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중이 겪은 망국, 가난,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효능감 저하와 맥을 같이 한다. 생존도 장담할 수 없던 극한 사태들이 20세기 초반부터 연이어 전개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것이다. ‘정권이란 사회 위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키톨 타워에 불과하다’(선우휘 1986a, 23)는 비유는 국가와 권력에 대한 그의 정치관을 대변한다. 소설 『불꽃』에 나온 은유인 ‘정부받지 않은 정부업자’란 말은 좌파 혁명가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가와 정치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 장편 『노다지』에 다음 장면이 나온다. 임시정부 요원인 동향 선배 독립투사 ‘이웅’과 조우한 주인공 ‘수인’의 일화이다. 이웅이 수인의 일가 어른과 일면식이

14) 2008년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계속 나빠졌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2011년부터 전두환정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한다(연합뉴스 2015/4/29). ‘국경없는기자회’의 2015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역대 최저 70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정권시기로서 31위였다(경향신문 2015/04/20; 중앙일보 2016/4/21).

있다는 연고를 알고 반갑게 만나지만, 대화 중 현실정치 이슈가 등장하자 갑자기 노인의 태도가 ‘돌변하며’, “정녕, 통탄지사라고!”라고 하는 데 수인은 조건반사적 거부감을 느낀다(선우휘 1986b 2권, 217).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지성이 아닌, 삶의 체험에서 온 전형적 ‘직관’이다. 빈농에서 자수성가해 자영농에 이른 부친의 삶을 지켜본 유년, 왕실과 양반의 무기력한 대응과 망국,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보통 사람의 삶에 권력과 정치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러한 평가 절하가 순전한 반정치 혹은 탈정치의식이라 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해 현명한 통치자가 아닌 일반인의 정치참여의 효능에 대한 회의를 가리킨다. 이 점에서, 그는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정치 모리매를 가차없이 비판한다.

여기서 그는 첫째, 보수주의 특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각별하게 강조하여 도덕적 덕목들 중 가장 중시했다. “높은 신분에는 도의적 의무가 따른다”는 독립된 칼럼 제목으로 불일만큼(선우휘 1986a, 241) 지대한 관심사였으며 타국의 귀감 사례를 제시하며 왜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가 통렬하게 비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러 칼럼은 물론 소설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죽는 것은 애꿎은 국민들이다… 지도자들의 2중 국적은 일부의 일이기 바란다.”, “김유신이 천관 앞에서 애마를 참한 것은 부하에 책임을 돌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장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자베르이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친구인 교수에게 데모하는 학생들 중 병역 기피자는 없는지 물어보니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럼 됐다’고 무릎을 쳤다.”(선우휘 1986a) 일제 지배와 북한의 공격에 무기력했던 엘리트들에 대한 질책은 비판을 넘어 경멸에 가깝다.<sup>15)</sup> 둘째, 국가 발전은 유능하고 책임윤리를 갖춘 엘리트에 의해 가능하며 대중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거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혁명과 같은 변혁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유보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의 근거를 작품과 칼럼에서 추론해 보면, 권력과 자본의 기득 이익을 지키려는 고의적 목적 아래 억지춘양식으로 그 의미

15) 선우휘(1975)의 소설 『짜릿골의 신화』의 주인공 장교는 “도주한 상관들을 찾아 총알을 박아주겠다”며 분개한다.

를 격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한국 보수세력은 대중 참여 확대를 색깔론을 불사하면서까지 부작용으로 진단해 왔다. 계몽주의가 진척되지 못한 곳일수록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하며, 역설적이지만 많은 대중을 동원하기도 한다.<sup>16)</sup> 동기와 배경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더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선우휘와 오늘날 한국 보수세력이 공유하는 셈이다.

### 3. 타협 없는 반공주의, 원칙과 상식에 대한 태도

그가 평생 고수한 반공주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비타협적 강경 노선으로 굳어진다. “통일도 좋고 남북 접촉도 좋지만 아직 북쪽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초기의 싱싱한 야만성과 교활한 잔인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선우휘 1986a, 196). 이론적으로도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전면 부정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옳았는데 뒤따른 실천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인가? 천만에!... 진주한 소련병들의 포악한 행동과 공산주의자들의 치졸한 주장에 염증을 느끼고... 30년간 나름대로 생각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계급적 증오를 매개로 보편적 사랑의 체제 구축을 바란 모순’이라는 E.H.카의 지적”(선우휘 1986a, 250).

이산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강경함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같은 월남 지식인 함석헌, 백기완, 계훈제 등과 대조적으로 선우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북한정권을 대결 상대로 간주했고,<sup>17)</sup> 통일정책의 원칙은 신뢰와 화해보다 부국강병으로 요약된다. 기본적으로 월남 이전 목격한 소련군의 실상과 군 복무 시절의 전투 경험, 그리고 기자로서 겪은 진보 인사들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초기 중편 『깃발없는 기수』와, 사후 발견된 다음의 서재 메모는 그 이유를 시사

16) 진보세력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대중의 잘못된 선택’에 실망한 나머지, 이론적 소신과 달리 엘리트주의적 행태를 드러내곤 한다. 그리고 대중을 신뢰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자는 주장은 ‘계몽의 역설’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므로 주장과 언행의 괴리를 빚기 쉽다. 그에 비해 보수주의자들은 엘리트주의적 언사를 삼가거나 비난한다. 특히 보수정치인들은 ‘소탈, 과묵’의 서민적 이미지를 과시하려 든다. ‘강남 좌파’ 답문이 나온 배경이다.

17) 백기완은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였는데 선우휘 별세 당시 흰옷을 입은 선우휘를 명동에서 만나는 꿈을 꿨다는 일화가 있다(김형민 2012).

한다. “기자로서 공개할 수 없었던 일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양심으로 포장된 허위, 순교자의 탈을 쓴 악인, 남을 악인으로 몰아치는 행위로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인간 군상들.”(선우휘 1986a, 310) 이를 진보진영 전체를 싸잡아 겨냥한 획일적 평가절하로 볼 수는 없다. 군사정권에 저항한 지인 지명관교수가 유신체제의 억압성과 민주화운동 정보를 일본 잡지에 가명으로 연재하던 사실을 함구했으며(한겨레 2012/05/02), ‘재야의 주먹’으로 알려진 방동규의 석방을 주선하고 생계를 도와주기도 했고(경향신문 2008/12/12), 젊은 시절 전염의 위험을 아랑곳않고 증병을 앓던 자신을 문병 온 동향 친구 계훈제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다. 사적 교분 외에도, 이북 출신 진보 지식인들이 정치적 고초를 겪을 때마다 묵인하거나 감싸곤 했는데, 물론 노선을 동조해서가 아니라 강한 동향의식과 형제애의 ‘의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명관의 회고에 따르면 그 점에서 선우휘는 한국적, 전통적 모럴이 아주 강한, 전형적인 한국형 보수주의자였다는 것이다(김건우 2015, 62-65).<sup>18)</sup>

다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소극적 자유의 연장선에서 반공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음이 서재 메모에 드러난다. 사회운동과 참여폭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보 이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별개로, 사람들과 겪은 면대면의 경험에서 우러난 의식의 소산이다. 이 점에서 그의 반공주의가 형성된 경로는 합리적 이론 대 이론 차원의 반대 토론 뿐만 아닌, 품성과 체험과 정서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론에 몰두하지 않고 현실을 주목하는 보수주의의 존재론적 속성이 그 태도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 북한을 순전히 멸공 상대로 보아 북진통일식으로 폐망시켜야 한다는 단선적 사고를 보이진 않는다. 그는 의외로 자신의 대표작으로 초기 단편 「단독강화」(2006)를 든다. 전장에 낙오된 남북한 두 병사가 우연히 만나 형제처럼 동행하다가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전사하는 줄거리이다. 전쟁 중 보고받은 실화를 소재로 쓴 이 소설을 칼럼에 소개하며(선우휘 1986a, 257) “명치 저린 아픔을 느꼈다”고 사회와 함께 칼럼 결론에서 냉전의 덧없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관변 보수주의자들처럼 앵무새마냥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변하지 않고, 분단이 타의로 빚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민족이 다시 결합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토로한다. 냉전과 전쟁이 무의미한 소모전이란 점을 의식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 그의 반공주의는 이데올로기, 즉 인간 해방의 동기로 출

18) 지명관 교수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어도 철저하게 그는 자기가 내 형이다, 동생을 돌본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김건우 2015, 62-65).

발한 근대 합리주의 정치사상 전반에 대한 짙은 회의와 결합하고 있다. 이 회의는 근대 보수주의의 기본적 인식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남북 화해나 적극적 통일담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서 차원의 통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병행되고 있음은 냉철한 합리성이나 정연한 이론이 아닌 직관에 따라 전개, 배열되는 보수적 사고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반공주의와 아울러 그는 남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나름의 덕목을 의식하고, 독재정권의 반칙과 부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만정권 말기 관권 남용과 부정 선거 및 이북 출신 청년들을 앞잡이로 이용하는 행태를 단편 「테러리스트」(2006)로 고발하며 대표작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리고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모든 언론이 침묵하던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사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한겨레 2013/09/15).

이 일련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북한보다 나은’ 남한으로서 원칙과 상식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보편 인권론에 근거한 이론적 정당화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우위’를 지속적으로 의식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정치적 연대나 저항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김대중 납치 비판 사설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주필의 직권을 발동한 단독 행동이었으며, 당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신문사도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침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한편, 당시 투옥된 시인 김지하에 대해 선우회는 이례적인 소견서를 제출한다. “나의 직관적인 판단임과 동시에 논리적인 사고를 거친 결론부터 말한다면 ‘김지하는 결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확신합니다. 법정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한 이상,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시인은 말할 나위도 없이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한겨레 2012/2/20) 당시로서는 용기 있는 청원이었지만 공산주의사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양심의 자유 제약을 은연중 시사한다. 이는 ‘시대적 한계’로 비칠 수도 있는데, 생애 후기로 갈수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시각은 착잡하게 변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 안보 및 발전 가치와 병행시킨 그는 결국 반공을 자유민주주의와 동렬에 두거나 더 강조하는 유동적 인식에 머무르게 된다. 추상적 이상보다 현상태를 중시하는 보수적 사고가 지속된 것이다.

## IV. 결론

선우휘의 보수주의와 서구 보수주의는 소박한 개인관이 동일한 요소이지만 기원과 맥락이 다르다. 목가적 전원을 동경하는 소박한 자유는 근대 자유주의와 다른 선우휘식의 ‘비자유주의적 자유’이며, 직관에 의존하는 행동주의 인간관은 분단 이후 극단적 정치 변동 중에서 합리성을 배양할 틈이 없던 한국인들이 본능적, 즉자적으로 삶을 도모한 데서 비롯된다. 전통 질서 보전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다. 강한 가족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강점, 분단, 전쟁 및 도시화를 겪으며 사회 연대망은 와해되었고, 개인이 안주할 곳은 가족 외에는 없었다. 관성적으로 잔존한 유교 가족주의와 연계된 이 현실적 조건에, 게다가 실향민 선우휘는 가족에 대한 짙은 향수를 줄곧 표현했다.

정치참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엘리트주의 또한 서구와 차별적이다. 서구 보수주의의 엘리트주의가 시민혁명에 대응해 기득권과 질서를 지키려 했다면, 선우휘 당대는 민중의 도전과 참여가 원천 봉쇄되어 있던 시기였고 1987년까지 한국정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한번도 없었다. 당시 선우휘를 비롯한 보수적 성향의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향유하지 못하던 원리이자 정착 가능성도 미지수인 공수표에 가까운 미래의 약속이었다. 민주화 투쟁이 어떤 대안을 가져다 줄지 가늠할 수 없던 처지에서 선우휘는 말년으로 갈수록 민주주의는 물론 대중의 정치 참여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여기에 이북 출신으로서 강경한 반공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좌파의 시민권 보장을 수반할 자유민주주의의 완전 제도화를 역설적이게도 본능적으로 경계하게끔 작용했다. 이 양가적 심리는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낳는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민주적 정치참여 확장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의식을 형성시킨 것이다. 재야와 학생운동이 당사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주장했다. 바로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모순된 통치 아래에서도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현실적 묵인을 택하게 된다.

2007년 이후 보수정치세력은 연임에 성공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한국 보수주의의 가치와 선우휘의 사례는 1987년 이래 민주화 30년을 맞아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첫째,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지탱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적 가치로써, 진보에

비해 논리적 일관성이 약한 취약성을 만회하려 한다. 선우휘는 그 점을 가장 강조했다. 병역면탈, 이중국적 등 도덕성에 관련된 보수세력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근대 보수주의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제 결함을 개선하려는 이니셔티브를 선점하려 노력해 왔다. 19세기 디즈레일리(B. Disraeli)와 비스마르크, 20세기 콜(H. Kohl) 등 보수 지도자들은 선제적, 때로 파격적으로 쇄신을 출선했고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최근 유엔, 앰네스티 등은 한국의 시민권 악화를 누차 지적해 왔다. 노선과 정책에 앞서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의 실태를 보수세력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선우휘는 군부정권의 억압성 앞에서 양가적 모호함을 보였다. 그 시기가 이미 40년 전이다. 셋째, 2000년 이후 남북관계 진전은 반공주의의 기반을 잠식시켰지만 보수정권이 연임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반공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반공주의가 정당화한 발전국가모델은 보수세력이 주도한 3당 합당을 계기로 신자유주의로 선회, 수정된다. 거의 유일하게 한국 보수세력의 가치가 변화한 지점이다. 그러나 시장제일주의로 빚어진 사회 불평등과 공공성 약화의 폐단 또한 성찰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방향 제언을 문제의식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 글의 문제의식과는 또다른 과제이다. 앞으로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현재, 전망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6년 4월 30일  
 심사일: 2016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8일

## 참고문헌

- 강정인. 2001.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계간 사상』 50권, 73-100.  
 강정인. 2008.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 『사회과학연구』 16권 2호, 6-40.  
 강정인·서희경. 2013. “김성수와 한국민주당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7권 1호, 103-126.  
 경향신문. 2016. “한국 언론자유지수 10계단 하락한 세계 70위…역대 최하위.”(4월 20일).  
 김건우. 2015. “반공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사이.” 『주간 동아』(10월 12일).



- 경향신문. 2008. “‘배추’ 방동규 “요즘 세상 의리가 없어 서운해.”(12월 12일).
-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서울: 당대.
- 김병국·김용민·박효종·서병훈·함재봉. 1999. 『한국의 보수주의』. 서울: 인간사랑.
- 김형민. 『그들이 살았던 오늘』.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김호기. 2005. “한국의 민주화세력 어디로 가고 있나: 2000년 이후의 보수세력: 수구적 보수와 뉴라이트 사이에서.” 『기억과 전망』 12호, 68-79.
- 라종일. 1990. 『신보수우익론』. 서울: 예진출판사.
- 류대영. 2004. “2천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 사회』 62권, 54-81.
- 문지영. 2006. “전후 소설을 통해 본 문학과 정치의 긴장: 선우휘의 ‘깃발없는 기수’와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문예비평연구』 20호, 333-358.
- 박광주. 1992. 『한국 권위주의 국가론』. 서울: 인간사랑.
- 박효종·복거일·원희룡·이한우·김정호·함재봉·정성환. 2005. 『한국의 보수를論한다』. 서울: 바오.
- 선우현. 2010.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기초: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251-283.
- 선우휘. 1973~1985. 칼럼/사설. 해당 일자.
- 선우휘. 1975. 『싸릿골의 신화』. 서울: 삼성출판사.
- 선우휘. 1986a. 『아버지의 눈물』. 서울: 동서문화사.
- 선우휘. 1986b. 『노다지』(1-4권). 서울: 동서문화사.
- 선우휘. 2006. “단독강화.” 『불꽃: 선우휘 단편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 선우휘. 2006. “테러리스트.” 『불꽃: 선우휘 단편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 신종화. 2012. “신보수주의와 대비한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 『한국정책연구』 12권 2호, 187-206.
- 양승태·설한·신충식·이완범·강정인·최치원·김비환·장의관·김동하·조경란·장인성·김명하. 2013. 『보수주의와 보수의 정치철학』. 서울: 이학사.
- 연합뉴스. 2015. “한국 언론자유 순위 67위…북한은 199위로 최하위.”(4월 29일).
- 윤민재. 2004. “한국 보수세력의 이념과 활동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사회이론』 26호, 242-274.
- 이근식. 2008. 『신자유주의』, 서울: 기파랑.
- 이나미. 2011. 『한국의 보수와 수구』. 서울: 지성사.
- 이봉희. 1996. 『보수주의: 미국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 이익성. 2004. 『선우휘』.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정석. 2010. “선우휘의 세계관과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42호, 215-235.
- 이항우. 2011. “이념의 과잉: 한국 보수세력의 사회정치 담론 전략.” 『경제와 사회』 89호, 217-268.
-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호, 83-106.
- 정해구. 2006. “한국 보수주의의 뒤틀린 역사와 전망.” 『시민과 세계』 8호, 358-377.
- 조희연.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읽는책.
- 주간동아. 2015. “마지막 지사형 언론인 천관우.” (12월 30일).
- 중앙일보. 2016. “한국 언론자유 180개국 중 70위로 떨어져…역대 최하위.” (4월 21일).
- 지명관. 2004-2005. “지명관교수 회고록” 연재 기사. 국민일보.
- 채장수. 2009.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 담론.” 『한국정치학회보』 43집 1호, 129-150.
- 최치원. 2009.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해석.” 『시대와 철학』 20권 4호, 231-266.
- 한겨레. 2012. “셋별 같은 청년들이 분단 때문에 끌려오는 일 없어야.” (2월 20일), 22.
- 한겨레. 2012. “‘TK생’의 고별 일갈 ”유신세력 회생? 안될 말.“ (5월 2일), 28.
- 한겨레. 2013. “선우휘, 그리고 조선일보의 한때 한겨레.” (9월 15일).
- 한국일보. 2015. “한국사 교과서 8종 쟁점 비교.” (10월 21일), 8.
- 한수영. 2001a. “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선우휘론.” 『실천문학』 봄.
- 한수영. 2001b. “한국의 보수주의자 선우휘.” 『역사비평』 57호, 52-85.
- 홍경준. 2009. “사회복지정책과 보수주의.” 『사회과학』 42권 1호, 135-157.
- Boaz, David 저. 강위석·김이석·김한웅·배진영·안재욱·이언주·전용덕·황수연 역. 2009. 『자유주의로의 초대』. 서울: 북코리아.
- Hirshman, Albert 저. 이근영 역. 2010.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Rawls, John 저. 황경식 역. 1999. 『정의론』. 서울: 이학사.
- Sandel, Michael 저. 안진환 역. 2010. 『왜 도덕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

ABSTRACT

---

## A Review of the Theory and a Case in Korean Conservatism: on Sunwoo Hi's Perspective

**Chang hee Lee** |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eory and thoughts of conservatism in modern Korean politics and Sunwoo Hi's case as a representative conservative intellectual in 20th century. According to this paper, I argue that the basic conservative virtues and principles formed in the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from 1960's to 1980's, when it comes to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I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s of modern conservatism and Korea's unique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their historical course.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conservatism and Korean conservatism due to Korea's modern political history. Sunwoo Hi's conservatism presents several unique elements and general characters. Political elitism, simple life of individual, and strong anti-Communism, statism.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nalyze of theory and case indicate the origin and causes of today's Korean conservative force and conservatism.

**Keywords:** Korean Conservatism, Anti-Communism, Developmental State, Traditions of Confucianism, Sunwoo Hi

